

도서관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문 세 흥

탐라도서관 사서
yuha1999@empas.com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가 지난 6월 3일 전국적 이목을 끌었던 초박빙 지역의 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 제주 지역은 도지사의 당락이 단연 압도적인 관심을 끌었던 지역 중의 하나였다.

지방선거가 있던 6월 2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은 자료실을 제외한 학생열람실과 4월 26일 오픈하여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자유(노트북)열람실은 정상적으로 개방하였고 투표사무원(관)으로 위촉되지 않은 일직자가 근무하였다.

6·2지방선거 때 도서관 일부를 이용자들에게 개방했던 일을 계기로 공공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공도서관이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사회적 책무)”과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봉사)”라는 ‘등가성’을 상호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위해 필자는 여러 이념을 규정한 선언 또는 헌장 등을 확인하였다.

도내 공공도서관의 휴관일은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638호)」에 의거하면 제25조의4에 “관장은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674호)」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규정은 “제2조의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투표율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 생각된다.

유네스코 공공도서관선언(1995.3)에는 “이 가치는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설적인 참여와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식, 사상, 문화와 정보를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윤리선언(1997.10)에는 “1.[사회적 책무] 도서관인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그리고 도서관헌장(1968.4)에는 “04.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라고 표방하고 있다.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칙을 설명하는 법률용어 중에 ‘이익형량의 원칙’ 또는 ‘법익형량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이는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본권에 대한 이익형량은 공익 대 공익 뿐만 아니라 공익 대 사익 간에도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에 의한 해결방법의 전제조건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어야 하고, 기본권 상호 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이익형량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등 위의 전제조건과 다르지 않다.

앞서 제시한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사회적 책무)’과 ‘국민에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봉사)’라는 ‘가치의 등가성’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며, 기본권 상호 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며, 이익형량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책무’와 ‘봉사’라는 상위의 가치를 서로 충돌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으며 존중하고 하는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 에 도서관의 휴관일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식이 될 것인가?

첫째, 자료실과 열람실 모두 개방하지 않고 전면 휴관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에 의해 부여된 선거권자가 아닌 19세 미만의 이용자인 초·중등 학생에게 제한적으로 부분 개관하는 것이다. 셋째, 투표일 종료 시점 이후인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변형 개관하는 것이다. 넷째, 전면 휴관하고 기타 휴관일 등을 임의로 지정 대체 개관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재미 불문학자인 이연행 교수는 ‘도서관 민주주의를 꿈꾸며’ (한겨레신문 2007.11)라는 기고에서 “이처럼 도서관을 필요로 하고 매일 책을 읽고 써야 하는 사람들은 지식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농민·노동자·군인·재소자 등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책 읽기가 기득권을 가진 특수 계층의 특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일상생활이 되는 날,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지적에 도서관과 민주주의 더욱 정확히는 ‘지식과 정보의 향수와 접근권의 형평’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오늘도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은 가장 소중한 도서관 자원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속한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중간·기말 시험에서의 만족할 만한 성적을 유지하는 것과 고용 지표의 악화 등이 반영하듯 지방·국가공무원 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의 성패는 그들의 향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황금과 같은 일정들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 손석춘(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생활정치가 필요합니다. 생활정치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는 참여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양한 도서관 발전 공약들을 소개 약속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광역의원 후보의 공약 중 “작은도서관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듯이 도서관은 이미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밀접한 생활정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공공도서관은 더 이상 정치에 냉소적이며 ‘투표 기피층’으로 표현되는 20~30대들의 정치적 ‘은둔지’나 ‘안식처’가 아니라 그들이 당당히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주권을 표출하여 도서관 이용에 있어 불편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인들도 도서관 발전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